

공유 자전거시대, 안전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광주시 안전 우려에 공유자전거 '타랑개' 일부지역서만 시범운영 자전거 도로망 등 미흡한데 카카오톡 'T 바이크' 도심 전역서 운영 파이고 가로막힌 곳 많아 사고 위험...안전 대책 마련 서둘러야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와 공유 교통수단의 편리함 등으로 공유형 전기자전거 보급이 확대되는 반면, 안전 대책과 인프라 구축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광주시가 운전자 안전을 담보할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일부지역에만 공유형 자전거를 시범 운영중인 상황에서, 골지의 대기업을 먼저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도입·운영해 안전 대책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IT 그룹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광주 전 지역에서 공유형 전기자전거 서비스인 'T-바이크'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T-바이크는 500대가 넘는다. 전동 킥보드처럼 정해진 보관소 없이 어디에서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킥보드보다 안전하고 짐을 실을 수 있는 점 등으로 1시간 이용하는데 6000원을 내야 하지만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T-바이크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주선(26)씨는 "평소 가까운 거리를 가야할 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왔는데, T-바이크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는 좀더 안전하고 앞에 바구니도 달려 있어 짐을 실을 수도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 사고 방지 대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T-바이크가 이용자를 요금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지만 별

개로 안전한 인프라 확충은 서둘러야한다는 얘기다.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기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1년 전부터 공공 자전거인 '타랑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자전거 도로망 정비 등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점을 들어 여태껏 전 지역 도입을 늦춰온 상태다. 현재 타랑개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만 200대가 운영중이다.

광주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도 많을뿐더러, 중간에 끊겨서 하나로 연결된 '망' 구성도 안돼 있다. 자전거 도로도 지난 2019년 말(661.39km)과 견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만 통행가능) 128.64km ▲자전거 전용차로(차도 일부중 자전거만 통행가능) 12.58km에 불과하다.

김씨는 "말만 자전거 도로이지 파이고 가로막히고 멀쩡한 곳이 거의 없다. 특히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퇴근길 자전거를 도로에서 달다가는 사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도로를 막히게 한다는 욕설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동킥보드가 대거 유입된 상황에서 도로 사정이 별로 나이지 않았는데 전기자전거까지 보급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교통전문가들 얘기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에서만 이용하는 반쪽 이동수단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무지구에서만 제한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일대에 놓여있는 카카오톡 T-바이크. T-바이크는 지난 4월 광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광주도심 전역에서 500여대가 운영 중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적으로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다른 허가,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지자체가 업체 진출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며 "어등대교 밑에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조만간 개통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뿔난 골퍼들의 반격

화순엘리체CC 대중제 전환하며 회원 계약해지 통보... 기존 혜택 제한 149명 가처분신청... 법원 "예약권 침해·비회원 그린피 요구 금지" 판결

"소송신청인들의 우선 부킹권(예약권)을 침해하거나 비회원 그린피(코스 사용료·Green fee)를 요구할 경우 골프장측은 1회당 30만원씩 지급하라."

골프장 회원인데, 우선 부킹 혜택을 받지 못한 다. 비회원 그린피까지 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A씨 등 화순엘리체컨트리클럽 회원 149명이 "골프장측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특전을 침해하고 부당한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엘리체레저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골프장측의 회원들에 대한 우선 부킹권 침해 금지 및 비회원 그린피 요구 행위를 금지하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인 화순엘리체CC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말이 나온다.

법원과 회원들 등에 따르면 골프장측은 대중제로 전환키로 한 뒤 A씨 등 회원들에게 '5년 회원 입회 기간이 끝났고 연장할 의사가 없어 2020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니,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골프장측은 또 지난해 12월 A씨 등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들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변제공탁' 형태로 맡긴 뒤 올 1월부터 이들에 대한 회원 대우를 하지 않았다. 이들 회원들에게는 주중 7만5000원, 주말 8만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골프장

이용료는 홈페이지상 주중 15만5000원, 주말 19만원(카트비 포함)을 내야 한다. 여기에 경기일 4주 전 주어지던 우선 부킹 혜택도 사라졌다는 게 회원들 주장이다.

코로나로 대부분 골프장이 불리는 이용객들로 '예약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낸 회원들의 경우골프장 마음대로 기존 혜택까지 제한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원규칙상 "골프장측의 회원들에 대한 골프장 회원계약의 갱신 거절 내지 해지의 사표시는 아무런 권한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해당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해 골프장측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회원 규칙에는 '정회원 등은 회사가 정한 거처기간(5차 규칙상 10년)이 지나면 회원의 탈퇴요청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회원 계약 존속 기간이나 회사측의 임의해지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적자가 쌓여 회원제로는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골프장측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남구, 60~74세 등 대상 '백신접종 예약 콜센터' 운영

광주 남구가 60세~74세 어르신들을 비롯해 유자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집단면역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약 콜센터를 운영한다.

남구는 19일 "60~7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위한 남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오는 6월 3일까지 운영하며, 동시에 관내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예약 접수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홈페이지(ncvr.kdca.go.kr) 이용에 불편을 겪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다.

남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전용 회선(062-607-4325-9, 4336-7) 7개를 마련,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전화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사전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얀마 활동가, 광주에 호소문 "5·18 광주정신으로 함께 투쟁해 주세요"

"미얀마에 민주화 정신을 심어 준 것은 5·18 광주 정신입니다. 미얀마의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A씨가 '광주민주포럼'에 호소문을 보내왔다.

재단측은 자칫 미얀마 군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활동가의 이름을 비공개했다.

이 활동가는 미얀마의 최근 상황을 전하며 국제적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그는 "사망한 시민 수는 800명에 가까워졌고, 체포나 구금된 자의 수도 4000여명 정도이며, 잔혹한 학살만행은 이제 너무도 공공연하게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체포된 분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군사쿠데타 반란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가 6만명을 넘어섰고 국경을 넘지도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정착할 곳 없는 별판과 동굴에서 지내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 쟁취를 위해 ▲지속적 저항 시위 ▲노동자 총파업 유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와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를 미얀마 정통 유립정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기 위한 운동 등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 5.18민주화 운동은 미얀마 1988년 8월 8일 8888항쟁의 원동력이 되었고 2021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염원을 불을 당겼다"면서 대한민국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회전 막은 차량쫓아가 위협 운전 택시기사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우회전 하려는데 비켜주지 않아 폴 승객을 놓쳤 다며 쫓아가 차량을 가로막는 등 승객을 운전자를 협박한 50대 택시기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을 할 수 없고 경적을 울려도 움직이지 않자 뒤쫓아가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가로막는가 하면, 1분간 도로 중간에 멈춰서는 등 택시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적을 울려도 피해 운전자가 정지선 앞으로 이동해주지 않아 폴 승객을 놓치게 된 데 화가 나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위협을 느끼게 했고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중개 환영.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싼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매매 - 평당 30만원씩

거문도 별장 주택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221평, 건물 21평
- ▶ 방 2, 화 2, 거실, 주방
- ▶ 바닷가 최고 전망
- ▶ 텃밭, 정자, 내부시설
- ▶ 매매 - 2억2000만원